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54
----------	-------

발의연월일 : 2025. 6. 12.

발 의 자 : 김윤덕 · 이원택 · 박희승
양문석 · 조계원 · 윤준병
조인철 · 이춘석 · 홍기원
박수현 의원(10인)

제안이유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유통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유산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산업”이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란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 및 지식·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유산산업 기반 조성

제5조(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국가유산산업의 분야별 육성 및 지원 정책

3.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가유산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

여 작성하되, 통계 작성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국가유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산업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의 정보·인력·기술·제품·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유산정보의 제공)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련 정보를 국가유산산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4.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활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에 신속히 이전(移轉)되고 산업화되어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2.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활용 촉진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창업 및 유통의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6.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제24조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운영 지원

8.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9. 국가유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

10. 국가유산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1.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국가는 전담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제13조(창업 및 유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국가유산산업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가유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정,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에 있어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고 문화유산의 원형과 무형유산의 전형이 유지되도록 분야별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 및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산산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3.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전시회 등의 개최
5. 국가유산산업등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6.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등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취득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18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2.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3. 그 밖에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 개발·연구 촉진) 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영상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24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운영과 이용·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경제적

· 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

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3(제22조의14부터 제22조의24까지)을 삭제한다.